

2025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3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2024년 12월 17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실

토론회 개최 배경

- 대한민국 교육의 전반을 뒤흔들 굵직한 사안들이 본격화되는 2025년
- 그 변화의 흐름을 알고 현재의 교육을 제대로 진단하고 지향점을 찾아야 함
- 교육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와 전망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와 공론화 필요
- 현장에 기반한 교육 단체와 정책가들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진행함

토론회 개요

제3차 토론회: 좌장 박대권(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발제 대전환·대갈등의 시대, 학교 현장으로부터 방향을 찾다

유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토론1 학교법에 담아야 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권한

최선정,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토론2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기술과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채송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실장

토론3 교육개혁의 환상이 낳는 관료화 현상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연구실장

토론4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YouTube 생중계



백승아TV

[완료]제2차 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

2024년 12월 3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

[완료]제1차 토론회: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 방안

이혜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2024년 11월 19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

주최

백승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주관



👉 행사 순서 및 자료집 순서

- 개 회 식 국민의례 및 귀빈소개
- 인사말씀
- 기념촬영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

- 좌 장 박 대 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학 교수
- 발 제 유 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대전환·대갈등의 시대, 학교 현장에서부터 방향을 찾다. 8
- 토 론 1 최 선 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학교법에 담아야 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권한 22
- 토 론 2 채 송 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실장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기술과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30
- 토 론 3 김 승 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연구실장
교육개혁의 환상이 낳는 관료화 현상 36
- 토 론 4 한 성 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 44
- 종합토론

■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아입니다.

오늘 “교육 대전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세 번째 교육 쟁점 토론회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해 주신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운동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진행된 첫 번째와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각각 지방재정 교부금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토론회는 그 연장선에서 격변의 시대에 학교 현장이 당면한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학교는 AI와 디지털 기술의 도입, 학력 격차 심화, 교사 업무 과중, 그리고 학생들의 복합적 문제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남발 등으로 인해 교권이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과 교사들은 그 중심에서 갈등과 변화의 소용돌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단순히 교육의 장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고민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입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 토론회가 우리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오늘 논의된 현장의 제언들을 입법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이 다시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풍성한 논의와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3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발 제

유 재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대전환·대갈등의 시대, 학교 현장에서부터 방향을 찾다.

유재_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제가 처음에 제안 받은 주제는 “교육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이다. 하지만 유행어처럼 남발되는 “교육대전환”, “미래학교”란 단어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저에게는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다. 어떤 방향으로 대전환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미래학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대부분 그런 단어를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주제를 조금 변경하여 대전환·대갈등의 시대 속에서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지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자 지난 10여 년간 노력해온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지금 학교는...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경쟁교육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니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사회의 변화를 따르고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이지만 하나 같이 학교는 과거에 비해 바뀐게 없다고 소리높여 이야기 한다. 이런 주장은 주로 학교 밖 인사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와 교사는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이고 과거의 구태스러운 교육을 담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2000년 초부터 작은학교 운동, 새로운학교 운동 등을 통해 학교 변화 나아가 교육의 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그 결실로 10여 년 전 진보교육감의 등장 이후 혁신학교·혁신교육이란 이름으로 많은 변화를 추동했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갇혀있는 것일까?

학교의 변화는 밖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교과와 그 내용 그리고 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었지만 수업과 생활지도 방식이 크게 변했고, 그 속에 구성원은 과거와 다른 종(種)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이고 그에 따라 학교 문화와 생활양식도 크게 변했다. 외부에서 그토록 비판하는 주입식·암기식 교육은 시험제도와 수업 내

용 및 방식을 구분하지 않아 생긴 착각일 뿐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속 풍경은 2000년대 초반과도 많이 바뀌었다. 분명 학교는 변하고 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구성원이 변함에 따라 당연히 변한다. 하지만 현재 너무 급격히 변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끌어 갈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공허하다. 현 정부는 AIDT가 도입되면 마치 미래로 나아갈 것처럼 호도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공간이 바뀌면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올 것처럼 이야기했다. 정말 그런가? 미래학교, 교육대전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현재에 발을 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학교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 모든 것이 학교 탓

현 교육체제는 20년 전 5.31교육개혁의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 5.31교육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에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흔히 말하는 경쟁교육의 폐해만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왔다. 교육은 서비스가 되었고 학교와 교사는 서비스의 제공자, 학생과 학부모는 서비스의 수요자가 되었다. 하지만 공교육은 다른 서비스와 달리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기에 이르렀다.¹⁾ 아이가 공부할 못해도, 아이가 교육활동 중 다쳐도, 친구들과 간에 다투어도, 급식을 먹지 않아도, 과제가 많아도 혹은 과제가 없어도, 하다못해 학원과 일정이 맞지 않아도 모두 학교 탓을 하기 시작했다.



1) 경기혁신교육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민. 유재. 2019.09.20.

□ 관계와 신뢰의 위기

이런 거시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더라도 현재 학교는 위태롭다. 가장 큰 이유로 관계와 신뢰의 위기를 들 수 있다. 교직 사회에 악성 민원의 공포가 만연해 있다. 일부 악성 민원의 사례가 과도하게 확산된 측면도 있지만 자신이 맞닥뜨린 학교현장의 경험과 겹치면서 공포와 무기력감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학생 생활 지도나 체험학습 관련 이견이 민원이 되고 그 민원이 갈등이 되어 교권문제로 커지고 급기야 교사는 병가, 학부모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속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공허하다.

□ 코로나19 이후 치유되지 않은 아픔

코로나19로 학생들은 그 이전에 경험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의 변화를 겪었고, 그 속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얻고, 학력 저하란 멍에를 쓴 채 학교로 돌아왔다. 사회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했다면 학교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는 학습 결손, 신체 약화,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이전 학교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²⁾ 이에 아이들은 아프다. 몸은 허약해 졌고, 마음이 아프고, 스마트 기기 중독으로 정신이 혼미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코로나로 보낸 아이들은 기본 규칙 지키기, 생활태도 등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격차가 벌어졌다. 이런 것이 누적되어 현재 무단 지각, 무단결석이 크게 증가했고 이를 지도해야 하는 책임은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상으로 지쳐가고 있다. 수업에서 배움을 거부하고, 생활지도에서 '어쩔건데'를 소리 높여 외치는 학생에게 교사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 스마트 기기의 침공

학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관계와 신뢰의 위기 외에도 스마트 기기 문제가 있다.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다시 잘 때까지 화면만 바라본다. 밥을 먹으면서 보는 것은 당연하고 등교 중 걸으면서도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본다. 수업에서는 칠판 대신 대형 화면을 보거나 개인 디바이스 화면을 본다. 스마트폰이 허용된 학교라면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만 잡고 있다. 물론 하교 후에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인터넷 강의를 스마트 기기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교과서마저

2) 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3 중 코로나19 세대. 유재

디지털로 만들어 강제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미래라 불러야 하는가? 비정상이라 불러야 하는가? 불안세대의 저자 조너선 하이트는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신랄하게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은 바람직한 것에 대한 판단보다 ‘좋아요’와 ‘댓글’의 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최신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항상 SNS에 접속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 상의 가공된 인물이 롤모델이 되다 보니 박탈감이 생기고, 각종 앱의 발달로 사이버 폭력, 딥페이크 등의 성범죄에도 쉽게 노출된다. 이런 이유로 아이들의 불안감과 우울증이 증가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부모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다.

둘째, 정부는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률화한다.

셋째, 학교에선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넷째, 자유로운 신체놀이를 확대해 아이들이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현실 세계에서 부모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면서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보호하고 있다고 일갈한다. 최근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변화는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 LA 공립학교, 뉴질랜드, 네덜란드,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유네스코도 ‘디지털 기술’의 폐해를 경고하며 학내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³⁾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스마트 기기 중독의 교육적 심각성은 마약보다 심각하다. 지난 10년 동안 알트스쿨, 칸랩스쿨, SOF(School of the Future) 등 디지털 기기를 적극 도입하며 미래학교를 표방했던 학교들이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사라져갔다. 우리 그 결과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 대전환 · 대갈등의 시대, 교육의 논의 방향

□ 산업혁명 별 교육변화

‘대전환’이란 말은 산업계에서 먼저 사용했다. 산업계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전개해야 할 시대적 상황 혹은 정책적 환경을 ‘대전환의 시대’로 정의⁴⁾한다. 이러한 대전환은 기존의 정책이나 법률과 제도가 유효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3) 경향신문 ‘도둑맞은’ 학습력 “범인은 스마트폰”(2023.07.27.)

4)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장석인, 2017

이런 대전환기에는 정책의 기조나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정책목표, 대상, 수단, 추진체계 등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산업계의 대전환은 4번째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교육도 변했다.

각 산업혁명 별 특징과 그에 따른 교육의 조응이 어떠했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기	내용	변화	교육 변화
1차 산업혁명	18C 후~ 19C 초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 단순 노동력 수요 증가 ▶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 필요성 대두	▶ 종교 교육기관의 축소 ▶ 공립학교 확대(기본소양 함양) ▶ 도덕 교육강조
2차 산업혁명	19C 후~ 20C 초	전기에너지 기반 대량생산 혁명	▶ 효율적 인력양성	▶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 ▶ 수학, 과학 중시 ▶ 중등교육 확대
3차 산업혁명	20C 후~ 21C 초	정보화 시대	▶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중시 ▶ 지식기반 사회 도래 로 다양한 분야 전 문인력 양성	▶ 대학교육 확대 ▶ 평생교육 도입 ▶ 직업교육 강화 ▶ 창의성, 문제해결력 중시
4차 산업혁명	21C 중~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기반의 초지능, 초연결 혁명		

간단히 요약하면 1차 산업혁명으로 기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종교 교육기관이 쇠퇴하고 3R's 중심의 초등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확대되었다. 2차 산업혁명으로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이 확대되면서 효율적 인력양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수학, 과학을 중시하는 중등교육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중시되면서 대학교육이 확대되었다. 그럼 제4차 산업혁명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이에 따라 교육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까?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2017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시절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교육 대전환”이란 글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를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2025년까지 9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일상적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무제한의 무료 디지털 정보저장을 할 수 있고, 10%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옷을 입고, 인터넷에 연결된 안경을 쓰며, 미국 차들의 10%가 무인자동차가 될 것이며 신호등이 없는 5만 명이상 인구를 가진 최초의 도시가 등장하며, 1조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되며, 5%의 상품이 3D 프린터로 생산되고, 자동차와 인공 간이 최초로 3D 프린터로 생산되고, 인체에 심는 최초의 전화기가

판매되며, 최초의 로봇 약사가 미국에 등장하고, 30%의 기업 회계감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인공지능 기계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고, 빅 데이터로인구조사를 대체하는 최초의 정부가 나타나며, 블록체인으로 조세를 최초로 징수하며,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의하여 저장될 것으로 예측 된다(Schwab, 2016).

2025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면 첫줄을 빼고는 모두 틀린 말이 되어 버렸다. 물론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예측이 상당수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변화에 맞춰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학교에서 지금과 같은 암기 위주 주입식 교육을 지속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없어질 직업을 위한 교육을 하는 셈이다. (중략)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대전환은 무엇보다 교수학습방식을 과감히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중략) 심층학습을 위한 대표적인 교수학습방법인 프로젝트학습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현실 문제 및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협동적인 그룹 활동으로 진행되는 학습이다. 이렇게 프로젝트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OECD의 TALIS(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에서 한국 중학교 교사의 프로젝트학습 비중이 비교 조사된 33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이주호 외, 2016).(중략)

학교 내신평가에서 수행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교사들의 수업이 프로젝트 학습과 같이 수행평가가 내재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생들이 사교육이나 학부모의 힘을 빌려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의 방안들을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프로젝트학습과 수행평가가 활성화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발시켜야 한다.

첫째, 교사가 프로젝트학습과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을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연수·지원·유인 및 양성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사 유인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학습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수업 중 제출된 학생 프로젝트들을 심사하여 우수 학생 및 우수 지도교사를 포상하고, 수석교사들이 교수학습법의 전문교사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단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 단위에서만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도 새로운 교수학습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변화를 지원하고 확산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중략) 이를 위하여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거나 원하는 학교부터 하나씩 프로젝트학습 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청별로 한두 개 학교의 시범실시를 거쳐 성공 모델을 찾아낸 후, 점진적으로 프로젝트학습 학교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학교 변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개혁은 정부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줄여주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긴 글을 인용한 이유는 이 글을 통해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부장관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왜 암울한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교육은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프로젝트수업을 장려하고 연구학교를 통해 지원·확산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 변화를 위해 자율학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다는 과거에 머문 현실 인식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대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학습방식의 변화라는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 더 참담한 것은 프로젝트학습이란 매우 지엽적인 것과 교육부 시그니처인 연구학교 그리고 자율학교를 대책으로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교육부총리를 경험한 경제학자의 교육에 대한 시각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느낄 수 있었다. 더 황당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방법인데 교사 연수, 교사 유인체제 강화, 경연대회가 그 방법이라는 부분이다. 왜 교육부가 AIDT와 선도교사연수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한 학교당 몇 억 원씩 지원하는 자공고를 확대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명확한 것은 위의 방식과 내용은 교육대전환도 미래 학교도 아니며 앞으로의 방향성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교육의 방향을 찾기 위한 질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초등교육이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중등교육이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을 통해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이 확대 강화되었다. 즉 점차 고도화되는 사회에 맞춰 교육체제가 더 깊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에는 대학원을 확대하면 될 것인가? 물론 아닐 것이다.

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잘 잡기 위해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하는 주된 단어와 이를 개선하고자 나왔던 단어를 살펴보자.

“주입식”, “선다형”, “프로젝트 학습”, “수행평가”, “논술형”

이 단어들은 모두 방식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교육을 비판할 때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도 방식을 논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최근 교육부에서 나온 단어는 “AIDT”로 방식이 아니라 그보다 하위인 도구이다.(‘하위’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뒤에서 다루겠다.)

또한 정말 주입식, 선다형이 그렇게 문제라면 주입식과 선다형이 주된 교육방식을 이루고 있는 한국, 중국, 대만, 인도, 일본이 문화·예술·최첨단 분야에서 왜 최고봉에 있는지 설명이 안 된다. 프로젝트 학습과 수행평가, 논술형이 주된 교육방식인 유럽의 나라들이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뭘까?

위의 질문과 더불어 최근 미래학교 관련 여러 이슈들을 보며 몇 가지 질문이 더 떠오른다.

□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필수인가?

최근 교육부의 AIDT 논쟁을 보면 AIDT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첨단 기술과 기기의 활용은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이다. 교육을 통해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학생은 인간이며 인간은 기계와 달리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선 관계, 분위기, 느낌, 노력, 의지, 동기 등 수많은 요인이 상호 작용을 하는 복잡계이다.

□ 학생의 선택권이 더 강화되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고교학점제부터 자사고, 자공고, 외고, 특목고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선택권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었다. 학생 선택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개인 맞춤형 개별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혹은 맞는 방향일까? 마치 식당에 가서 식당메뉴와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거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하라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학교에서 드는 느낌은 거기에 더해 요리한 음식을 입에 넣으라고까지 느껴진다. 내가 먹고 싶은거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또한 원하는 것만을 할 수도 없다. 균형 잡힌 식사가 늘 맛있는 것은 아니듯 꼭 필요한 것은 배우기 어렵기도 하다.

□ 학습환경이 바뀌면 미래학교가 되는 건가?

학교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이란 단어가 자주 쓰인다. 최근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2022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는 중에 있지만 외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교과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는 IB도 교과와 내용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다. 교육대전환, 미래학교란 단어가 남발되지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발달을 통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내용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바꾼다고 미래학교가 되는 걸까? 아래는 최근 교육부에서 AIDT 전시용 버전을 초등학교 선생님이 사용한 결과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너무 한심해서 별도로 논하지 않겠다.

계산 결과를 찾아줘.

오전 10:17

아직은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한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다른 내용을 질문에 주시거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궁금한 메뉴를 다시 선택하여 입력해 주세요!

처음으로 >

오전 10:17

현재 페이지의 문제를 설명해줘.

오전 10:18

아직은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한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다른 내용을 질문에 주시거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궁금한 메뉴를 다시 선택하여 입력해 주세요!

처음으로 >

오전 10:18

학습(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입력해주세요.

개념학습

오전 10:18

궁금한 수학 개념을 질문에 보세요!
[예시]
기수, 자릿수, 선분, 둔각...

처음으로 >

오전 10:18

기수가 뭐야

오전 10:18

아직은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한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다른 내용을 질문에 주시거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궁금한 메뉴를 다시 선택하여 입력해 주세요!

처음으로 >

오전 10:18

AI 챗봇과 대화 중 ✕

개념
학습

오늘의
과제

학습
분석

사이트
이용
안내

큰 수 관련 성취기준을 알려줘

오전 11:45

만, 억, 조와 같은 큰 수를 읽을 때는 앞에서부터 네 자리씩 끊어 읽습니다.

처음으로 >

오전 11:45

얼마정도 부터 큰수라고 할 수 있을까?

오전 10:17

어떤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지 자신만의 가치관을 먼저 생각해 보고 다양한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거나 봉사활동을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으로 > >

오전 10:17

아니 성취기준을 알려달라고.

오전 11:45

아직은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한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다른 내용을 질문에 주시거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궁금한 메뉴를 다시 선택하여 입력해 주세요!

처음으로 >

오전 11:45

□ 왜 미래학교에는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 논하지 않는가?

교육대전환, 미래학교를 논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이고, 하루 빨리 합의해야 할 내용은 가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이 사회와 국가를 넘어 세계적 상황으로 치달고 있고, 우리 사회는 다문화국가로 되어가고 있으며, 빈부격차의 되물림이 교육격차의 되물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AI로 산업계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에 어떤 가치를 담아야 하는가를 하루 빨리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교과목의 구성도, 교육과정의 내용도 크게 바뀔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교사양성 교육과정도 대폭 수정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우리는 어떤 가치에 따라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먼저 논의하고 이후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은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입장에 있는지, 변화를 위해 무엇을 설득하고 합의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들어내야 한다.

3. 미래학교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들

□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들

기계의 발전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문자와 기록이 널리 퍼질수록 암기력은 점점 떨어졌으며, 계산기가 많이 쓰이자 암산 능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등장으로 사용 방법이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나머지 굳이 정신을 모으지 않아도 돼 사람의 집중력을 흐트렸다. 또한 내비게이션은 숲한 길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⁵⁾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만 할게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이를 공교육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계가 알려주는 데로 움직이고 생각하면 이성보다는 본능에 더 가까워진다. 고도화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사고는 문명인이 아니라 구석기인에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 요즘 아이들 이해하기

요즘 아이들은 인과관계 보다 상관관계를, 이성보다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대 검색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인과관계를

5) 디지털네이티브에게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안광복. 2023

따질 필요가 없다. 검색을 통해 왜 그런지 알아보는게 아니라 검색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긴 글을 읽지 않고 제목만 보며 한 줄로 요약해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원글을 읽지 않고 댓글을 보며 댓글을 단다. 이런 댓글과 대댓글이 이어져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 속에는 이성보다 감정이 넘쳐난다. 이런 현상은 학교 현장에 넘쳐난다. 우린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존의 교육학 어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을 이제는 발달한 뇌과학의 힘을 빌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하루빨리 교육학에 현대 뇌과학의 성과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 100년 전 존 듀이가 알려준 것들

존 듀이의 저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는 1929년에서 1932년 사이에 발생한 대공황이라고 한다(Ratner, 1989). 존 듀이는 대공황 시기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위기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학교에 학교에는 수많은 가치와 역할이 부여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 되었다. 혼란의 과정에서 학교가 본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당장 급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결국 장기적인 교육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존 듀이는 학교가 수행해야할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제시한다.⁶⁾

‘단순화’, ‘순수화’, ‘균형화’

단순화는 복잡한 문명을 부분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교과체계와 어울리는 원리지만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교과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순수화는 기존 환경에서 가치가 없는 것을 제거하여 학생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선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여기에 더해 가치가 있고 없고의 이분법적 선별을 넘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균형화는 학습자가 소속된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양한 환경과 생생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이 현재와 같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리로 특히 사실상 다문화 국가인 한국에서 많이 고민해야 하는 원리라고 생각한다.

6) 대전환 시대, 학교와 사회의 상호작용 원리 탐구, 정철희, 2022

4. 마치며(혁신학교를 통해 얻은 성찰)

지난 10여 년간 혁신교육을 실행하며 깨달은 것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에서 도구보다 방법이 중요하고, 방법보다 내용이 중요하며, 내용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관계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뿐 아니라 교사와 교사, 교사와 관리자,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공동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의 운영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민주적이어야 하며 학생과 교육활동을 중심에 두는 것을 핵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온통 방법과 도구만을 있으며, 각 종법률이 구성원 간의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Fullan(1991)은 교육변화의 실행은 기술적으로는 단순한 것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것임을 지적하며, 교육변화의 성공적인 실행에는 교육변화를 직접 실행하는 ‘인간’이라는 요인이 관건임을 역설했다. 인간은 참으로 예측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인간이란 변인을 그냥 무시해버린 교육정책과 실행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교육의 성패는 결국 학교 현장에서 그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교사에게 의해 달려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 있고,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을 연수와 승진 가산점 같은 유인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거듭된 실패 방법의 답습이다.

교육의 대전환과 미래교육을 논하는 지금 혁신교육을 통해 우리가 성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하고 싶다.

2025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3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토 론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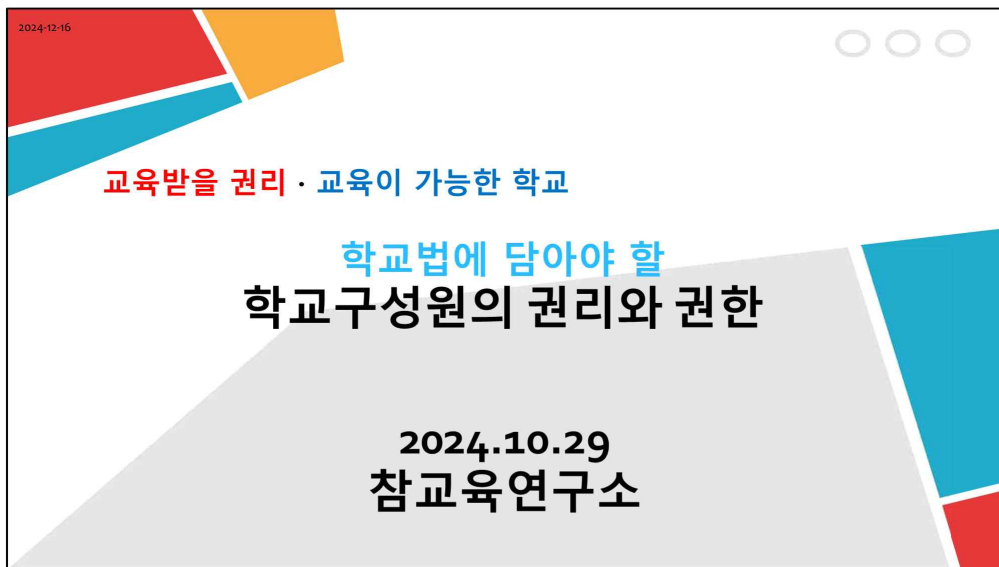
최 선 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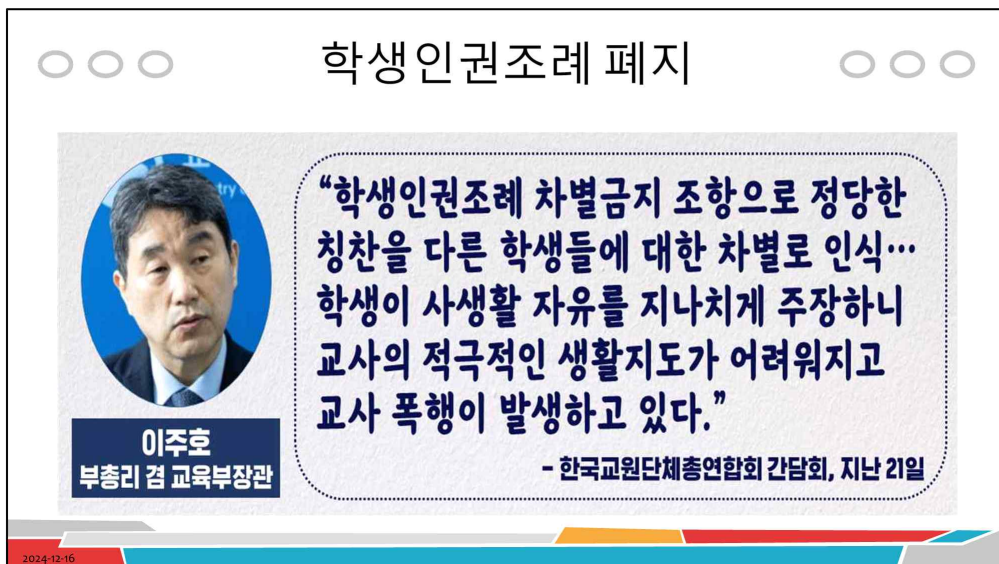
- 교육받을 권리 · 교육이 가능한 학교 -

학교법에 답아야 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권한

최선정_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



1



2

조례와 교권침해 상관성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현황

(단위 : 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5년
조례 유	0.59	0.53	0.61	0.27	0.51	0.50
조례 무	0.61	0.60	0.62	0.29	0.54	0.54
전체	0.60	0.57	0.62	0.28	0.52	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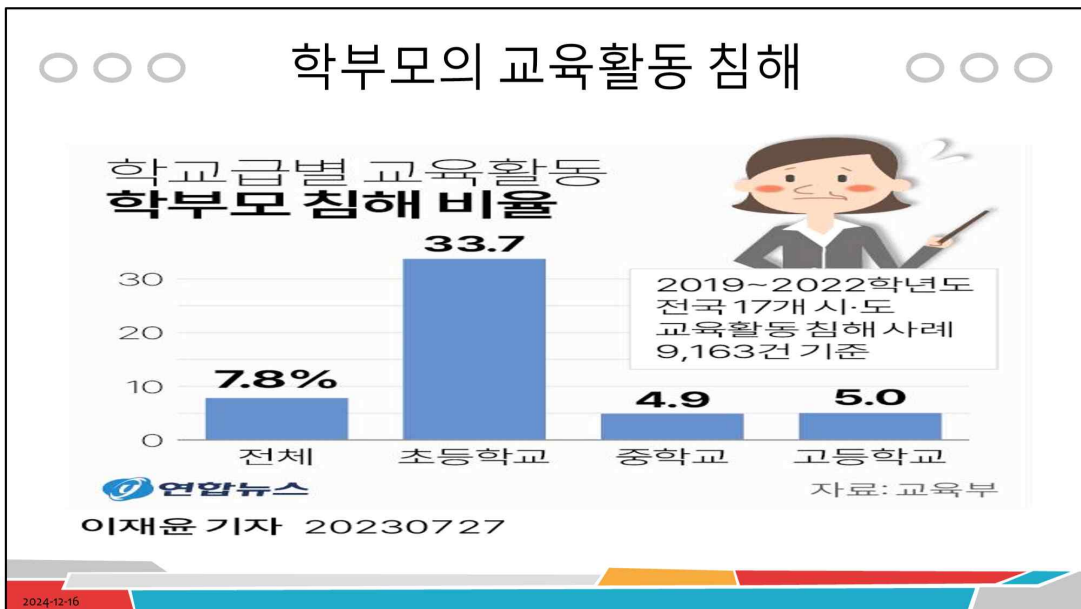
3



4



5



6

교원 아동학대 행위자 현황

□ 유·초·중·고 교직원 「아동학대행위자」 현황

연도	신고 접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행위자			비율	
				유치원	초·중·고	계	유치원	초·중·고
2014	17,791	15,025	10,027	99	145	244	0.9	1.4
2015	19,214	16,651	11,715	203	234	437	1.7	2.0
2016	29,674	25,878	18,700	240	576	816	1.3	3.1
2017	34,169	30,923	22,367	281	1,345	1,626	1.3	6.0
2018	36,417	33,532	24,604	189	2,060	2,249	0.8	8.4
2019	41,389	38,380	30,045	155	2,154	2,309	0.5	7.2
2020	42,251	38,929	30,905	118	882	1,000	0.4	2.9
2021	53,932	52,083	37,605	140	1,089	1,229	0.4	2.9
계	274,837	251,401	185,968	1,425	8,485	9,910	0.8	4.6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자료

2024-12-16

7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

구분	교육감 의견 제출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없음	기타	총계
건수	387 (70%)	130 (23.5%)	36 (6.5%)	55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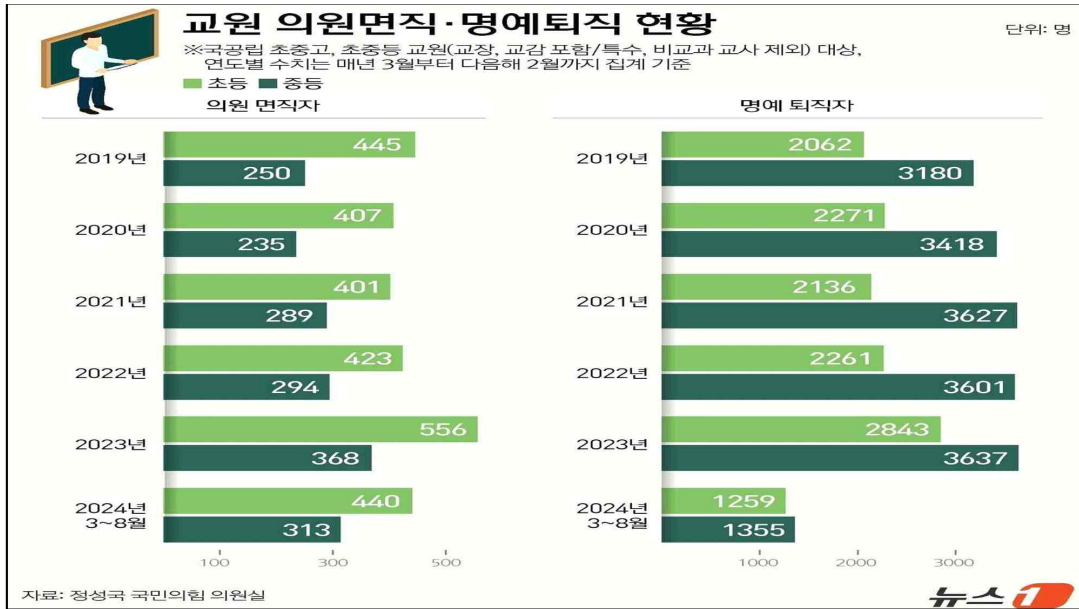
※ 기간 : 2023.9.25. ~ 2024.8.31.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불입건 등)	검사 결정 종결 내역				소계
	불기소	아동보호사건 처리	기소	기타(기소 중지 등)	
42 (26.2%)	95 (59.4%)	13 (8.1%)	7 (4.4%)	3 (1.9%)	160 (100%)

(단위: 건)

2024-12-16

8



9

○○○ 학교법을 제안하는 취지 ○○○

- ▶ 학생인권 보장해야 함
- ▶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 침해는 상관관계가 없음
- ▶ 학교폭력 해결과정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증가
- ▶ 학교는 전쟁터 - 법으로 해결 - 로펌이 해결(돈)
- ▶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지도의 무력화
- ▶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이 가능한 학교의 1차적 과제
- ▶ 학교구성원의 법적 권한과 권리 명시한 학교법

2024-12-16

10

○○○

학교법 주요내용1

○○○

- ▶ 학교자치법 - 학교자치회 구성 교장선출보직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구성
- ▶ 보편적 인권보장은 인권법 제정 - 학교법에서는 학교에서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권한 규정
- ▶ 학교폭력예방법 폐지하고 학교자치회에 조사권 중재권 징계권 부여하고 불복절차는 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하며 교육적지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형사법 적용
- ▶ 교사에게 편성권 평가권 생활지도권 부여

2024-12-16

11

○○○

학교법 주요내용2

○○○

- ▶ 쟁점 : 장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감 학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권한과 권리 재 규정
- ▶ 학교자치 교권보장 학생인권보장 학교폭력예방을 학교의 교육적 지도의 관점에서 학교법 제정
- ▶ 전교조 추진전략
 1. 학교법 제정 취지의 공감대 형성
 2. 학교법에 담아야 할 내용 마련 및 토론
 3. 사회적 제안 - 각 단체와 정치권의 법률 및 외국사례 검토
 4. 학교법 초안 마련

2024-12-16

12

2025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3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토 론 ②

채 송 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실장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기술과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채송화_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실장

경주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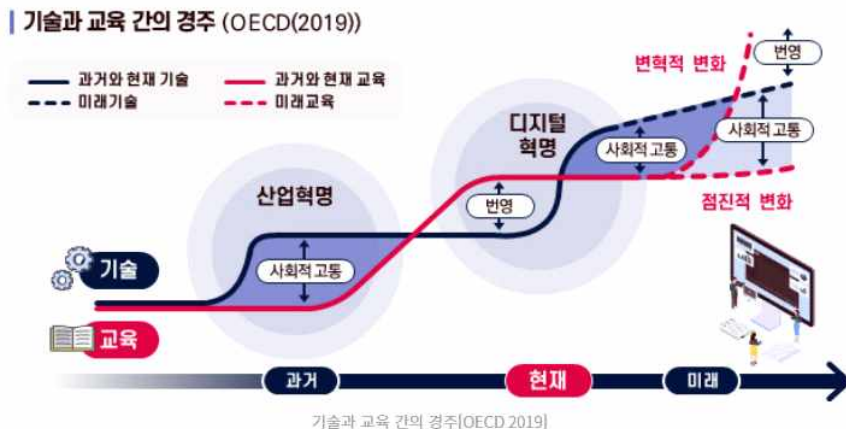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생은 국가의 위기로 대두되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우울증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파르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더 크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AI로 만든 광고 샘플
보러가기 QR코드

로렌츠 카츠와 클라우드아 골딘은 국가의 발전을 ‘교육과 기술 간의 경주’로 비유한 바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교육이 기술과의 경주에서 뒤처질 때 경제 성장이 느려지고 경제 불균형이 확대된다. 반면 교육이 기술을 앞서갈 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경제 불균형도 개선된다. 산업혁명 시기 교육은 ‘보통교육의 확대’를 통해, 기술과의 경주에서 승리했다. 디지털 혁명의 시기, 교육이 경주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고통의 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다.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사회적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강점 및 장애물

대한민국의 교육은 OECD 국가 중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으며, 교육 기반 시설이 발전되어 있다. 높은 교사의 질과 부모의 교육열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강점이다. 대학 학위를 보유한 비율이 70% 이상(OECD평균 44%)이고, PISA 2022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매우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미비, 교사가 본질업무인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 환경, Top-Down식 국가 교육 정책 및 사업 추진, 낮은 보수, 경쟁교육 풍토, 비민주적인 학교문화 등은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변화 및 발전을 막고 있는 장애물로 지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화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24.10.1)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 3,705명으로, 2019년 대비 24%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은 참여 32개국 중 1위, 컴퓨팅 사고력은 참여 22개국 중 2위이지만, 효능감은 31위로 나타났다. 1등을 하지 못하면 열패감을 느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은 변화가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은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가?

UNESCO는 미래 사회를 위해 육성해야 할 역량으로 협동, 협력, 연대, 상호의존, 포용 등을 강조하였고, 지식에 대한 비판적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언어적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문해력 등의 문해 교육이 미래 교육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OECD 교육 2030에서는 변혁적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긴장과 문제에 대한 해결하기, 책임감 갖기를 제시했다.(김미경 외, 2022)

UNESCO와 OECD 모두 사회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해 발표된 2028 대입개편안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의 방향성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와의 연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고, 고교 내신과 수능에 상대평가가 유지되며,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해소의 길과 더욱 멀어졌다.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시행된다. 대입제도의 개선 없는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고교학점제가 되어버릴 예정이다. 학생·학부모는 진로 관련성이 높은 과목이나 학교를 선택하는 대신, 더 좋은 성적과 대입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 격차 심화 및 도서 지역 작은 학교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내년부터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가 시행된다. 책임 교육의 하나로 이수 기준에 미달한 학생들에게 보충 학습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학생마다 ‘미이수’의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할 것인데, 그 해결책은 ‘교사’에게 모두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선택에 따른 다양한 정답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의 대입제도는 여전히 줄세우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교육 여건 및 제도의 개선 없이 추진된 선택권 다양화는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켜 왔다.

프리츠 마흐럽은 ‘한 분야의 지식의 절반이 쓸모없는 것으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의 길이를 지식 반감기’라는 용어로 소개했고, 새뮤얼 아브스만은 지식의 유효기간을 정의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최근 기술의 발달로 지식의 반감기는 더욱 급격히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스킬과 리스킬, 즉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새로 배우는 능력이 중요하다. ‘지식’ 그 자체보다 ‘지식’을 선별하고 다루는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이 이러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 정책, 누가 결정하는가?

교육 정책, 누가 결정하는가? 많은 문제의 답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Top-down 식 교육 정책·사업 추진 방식을 경험해 온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 이번 디지털기반 교육 관련 사업에서도 사회적 합의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 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고교 무상교육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축소 등 세입 감소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지만 곧 이마저도 고갈될 것이다.

급속한 기술 발전과 심각한 저출생 등 인구 변화의 시기, 보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나 정책 추진의 과정이 보육과 교육, 각각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국가 책임의 명확한 재정투자 및 가이드라인, 각 주체 간 소통과 협의의 과정은 필수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다양한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그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언제까지나 교사들의 자발성과 개인 역량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육 정책의 현장성·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정책 등 교육문제해결에 교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교사나 교원단체가 참여하여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해야 한다.

UNESCO는 미래 교육을 위해 교사라는 직업은 ‘협력적 직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UNESCO는 지식의 측면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은, 교육 수요에 맞춘 교원 정원 확보가 우선이다. 학교의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교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할 적절한 보상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근 ‘문화’와 ‘교육’, ‘연대’의 힘을 다시금 깨달았다. 학생은 수업에서만 배우지 않는다. 학생을 둘러싼 학교와 학교문화, 사회가 모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평적·민주적 학교문화의 정착이 중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김미경 외. 미래교육 전망: UNESCO 교육의 미래와 OECD교육 2030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2.

김은영. OECD교육2030:미래 교육과 역량. 서울교육. 2018.

이규빈 외. 각자도생하는 학교, 고립된 교실, 자책하는 교사. 한국교육사회학회. 2023.

교육부.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 결과 발표. 2024.

2030미래교육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자료집.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과 주요 의제. 국가교육회의. 2019.

2025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3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토 론 ③

김 승 호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연구실장

교육개혁의 환상이 낳는 관료화 현상

김승호_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연구실장

시작하며

토론문을 작성하며, 많은 고민이 들었다.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3회 연속 이어진 이 대토론회의 피날레로서 어떤 내용을 토론에 담아야 하는 생각이었다.

3회에 걸친 이 토론회는 첫째 교육재정에 관한 대안을 모색했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의 모습에 대해 토론하였다. 셋째 대전환 대갈등의 시대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토론자의 생각에 이 세 가지 주제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 주도의 관료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있다. 첫째, 교육재정은 사업 중심의 재정정책에서 벗어나 교실 중심, 학교 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는 그간 교육부가 갖고 있던 강한 권한을 대체하려던 시도의 실패와 그 대안 모색에 있다.

마지막 주제의 제목인 “교육대전환의 시대,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서 발제자 역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의 10여년의 고민을 읽으며, 토론자로서 그 고민을 함께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한다.

언젠가부터 교육대전환, 미래학교, 미래교육과 같은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어떠한 방향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이 단어가 쓰이는 맥락은 다르다. 이 부분은 발제자가 이미 지적했듯이 ‘현재 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현재 교육은 문제여서 대전환이 필요하며, 미래학교와 미래교육은 지금의 것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냐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 이 단어들은 텅 빈 기표에 불과하다. 이 기표에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엮어내는 것은 ‘합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치’의 영역에 가깝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들은 이 정치 게임에서 계속해서 지고 있다.

맞춤형 교육개혁의 환상

교육은 끊임없이 개혁과 혁신을 외부에서 요구받아 왔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 혁신, 더 나아가서는 혁명의 배경에는 특정한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예를 들어, AI 디지털교과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고교학점제는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그 정책 내용만 다를 뿐 똑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다. 물론 잠자는 교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만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맞춤형교육이 꼭 AIDT나 고교학점제의 전유물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맞춤형 진로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학생 맞춤형 학습을 내세웠다. 어쩌면 이 문제의식의 출발은 발제자가 언급한 5.31 교육개혁에서 제시된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 교육운영’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7차교육과정에서 개인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표현이 명시됐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8번이 등장할 정도가 되었다. 2015년에는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야말로 ‘맞춤형’을 위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 맞춤형을 위한 문제의식을 검토하면 학교는 수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자거나 집중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 싶어 하는 어떤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을 이 문단에서는 맞춤형 교육이라고 제시했지만 미래교육이라는 이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발제자가 ‘학교 탓’의 영향을 주게 되었다고 말하는 5.31 교육개혁 이후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결과물이다.

다만 맞춤형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 고교학점제에서 추진하는 맞춤형은 교육과정의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 반면 AIDT의 맞춤형 교육은 학생의 상태를 분석해 ‘콘텐츠’를 제공한다. 각각은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함께 묶기에는 곤란한 지점이 있음을 사전에 언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맞춤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위의 정책 간 이질감에서 느껴지듯이 그 의미가 다 다르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텅 빈 기표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런 개별화, 맞춤형의 개혁 속에 학교는 여전히 의미 있는 단위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발제자가 언급한 ‘학생 선택권 강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테면, 이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High Tech, High Touch의 시나리오에 꼭 ‘학교’라는 공간이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 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꼭 교실을 통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선택권을 강화해서 얻으려는 것이 잠자는 교실을 깨우기 위함이라면, 꼭 그 수단이 개별화, 맞춤형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이후 서술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학교는 학교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더 관료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행정의 강화를 부르는 교육개혁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교육행정이 강한 권력을 갖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대대적 개편은 필연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동반해야 하며 이는 곧 대규모 연수를 불러일으킨다. 연수란 일종의 정책 수단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수많은 연수,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 AIDT를 위한 12,000명의 교실혁명 선도교사와 찾아가는 학교연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수는 연수를 시행하는 기관에 주도권이 생긴다.

게다가 관료 체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생성하고 해석할 권한은 상층부에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는 내년에 도입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라는 것을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실행하게 되는데, 이 방침은 모두 교육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과 학교, 교사 모두 교육부가 내릴 방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수 역시 마찬가지다. AIDT 연수 역시 표준화된 연수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변형을 가하는 선에서 제공되었다. 이처럼 관료 체계는 매뉴얼과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한 경직성으로 나타났고 교사들 역시 매뉴얼에 과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낳았다⁷⁾.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관료들의 문서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전형적인 관료제형 모형을 택하고 있다. 또한 학교별 정책이 아니라, 일괄 정책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모형을 강요한다. 따라서 교육정책에 대한 개혁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이미 관료적이다. 이는 정책이라는 도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오히려 많은 문제들은 해결이 아니라 ‘해소’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이를 반드시 정책이라는 형태로 해결하려고 한다⁸⁾. 지난 몇 년간 교원단체의 모습 역시 비슷하다는 점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

7) 김승호(2023). 학교폭력 처리의 딜레마. 월간교육정책포럼 통권361호.

8) 사공영호(2015). 제도와 철학. 서울:대영문화사. p334

OECD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가 예견한 AI 디지털교과서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으로 오면 이는 정점에 달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OECD에서 제시했던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자. 익히 알려져있다시피 OECD 미래 학교교육시나리오는 기존에 2001년에 쓰였던 여섯 개의 시나리오를 2020년에 재분석하여, 2040년에 일어날 법한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학교교육의 확대, 둘째는 교육 아웃소싱, 셋째는 학습 허브로서의 학교, 넷째는 삶의 일부로서의 학습이다.

그런데 KEDI에서 정리한 이슈페이퍼 ‘OECD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와 시사점’을 보면, 이 중 첫 번째 시나리오인 ‘학교교육의 확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교 시스템의 **관료적인 성격**이 유지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많은 국가에서 **공통 교육과정 및 공통 평가제도**를 적용한다. 통일성 및 표준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합의된 핵심역량을 성취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별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학습 내용 선택권이 늘어난다. (중략) 국경을 넘은 **공공기관과 사기업 간의 협력**이 디지털 학습환경을 발전시킨다. **학습 자원과 데이터들이 국제적으로 공유**된다. (중략) 또한, **교육 소프트웨어가 직접 학습컨텐츠를 전달하고 감독**하기도 한다. (중략) 디지털화로 인해 학생들은 더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의 감정적인 니즈를 지원하거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된다.⁹⁾
(굵게는 토론자)

좀 길지만 인용한 것은 이 글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시스템은 관료적이며, 통일성과 표준에 기반하고자 데이터 의존적이며 교사들은 동기 유발이나 감정적 지원으로 역할이 제한된다. 이를 읽으면서 High Tech, High Touch를 떠올렸다면 토론자가 느낀 감정과 일치한다.

핵심은 이 글의 첫 문장에 있다. 학교는 여전히 ‘관료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4번의 굴절을 거치면서 매우 관료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때로는 이것이 과거 가족오락관의 ‘고요속의 외침’처럼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유실과 왜곡이 일어나는 구조 같기도 하다. 전달되는 과정에서 Why는 사라지고 How만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공문 터미널이었던 교육청의 역할을 개혁 해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고, 혁신학교는 학교로부터

9) 박은경(2020). OECD 미래 학교교육 시나리오와 시사점. ISSUE PAPER CP 2020-20. p.9

의 개혁을 추진했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발제자가 인용한 이주호 장관의 글을 보면, 이주호 장관 역시 관료제를 개혁하기 위해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시장 거버넌스’를 구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신공공관리론은 분산화와 경쟁, 인센티브 등 민간 부문의 경영관리 기법들을 도입한다. 실제로 AIDT와 관련된 정책 추진 과정을 보면 이와 매우 닮아있다. 교실과 수업 단위로 분산화 시키고, AIDT를 추진하며 학습콘텐츠 간 경쟁을 시키는 한편, 디지털 뱃지, 자료나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학교의 공동화와 교사의 고립을 가져온다. 발제자가 지적했던 디지털 기기와 기술 발전의 영향은 학생에게만 있지 않다. 교사들에게서도 이른바 교사의 탈(脫) 학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교사들은 이제 문제를 옆 자리 또는 옆 반 동료교사와 나누지 않는다. 인디스쿨이나 단톡방 같은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곳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다.

흥미로운 것은 교육부는 이러한 커뮤니티조차 다시 교육부가 주도한 ‘함께학교’라는 플랫폼으로 집결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AIDT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면, 결국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디지털로 이주시키려 하고, 그것을 교육부의 관할 아래로 모두 통제하는 ‘강한 행정부’를 만들려고 한다. 이처럼 교육부는 끊임없이 행정을 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정부는 교육부 주도 정책이 많아서 주로 교육부 얘기를 했지만 교육청이 주도하는 정책 역시 이러한 특성은 마찬가지다.

결론없는 결론

토론자는 교육개혁은 결국 교육행정의 권력 강화의 형태로 발현된다고 하였다. 교육개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데 교육에서 정치와 행정의 강한 분리는 결국 이 과정에서 관료들이 이기는 게임을 하게 돕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교육개혁이 무용하다거나 하는 말은 아니다.

“모든 정책은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나오는 동시에 그 안에 존재한다.”¹⁰⁾는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즉, 학교는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하여야 하고, 어떤 거버넌스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그 거버넌스는 좁은 네트워크가 아니라 넓은 네트워크를 향해야

10) Manna, P., & McGuinn, P. (Eds.). (2013). Education governanc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Overcoming the structural barriers to school reform. Rowman & Littlefield.

한다. 발제자가 교육적 관계와 내용에 대해 나누었던 것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재서술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같은 얘기다

최근 한 학회에서 일본은 교육경영(일본에서 교육경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적 경영보단 자율적 운영에 가깝다)학회가 교육행정학회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교육행정이 닿지 않는 곳에서부터 교육경영이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우리가 개혁해야 하는 대상은 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행정이다. 교육재정만 하더라도 엄격한 규제들이 더 문제 아니던가.

‘미래학교’라는 이름의 대전환보다는 현재의 학교에 기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이는 일종의 ‘정치’이다. 이 정치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을 걷어내고 그 공간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믿음과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틀 속에서 학교는 관료화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세세한 규정과 매뉴얼을 교사들 스스로 요구한다면 교육은 더더욱 행정화되고 관료화된다. 이를 밀어내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요구를 교원단체들이 이해하고 토론하며 일종의 교육 시민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학교의 신뢰는 결국 시민들을 통해 획득하는 수밖에 없다.

2025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3차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토 론 ④

한 성 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

한성준_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교직원단체가 연대해 미래 학교의 모습과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이 자리는 생각할수록 뜻 깊은 자리이다. 이는 교사가 교육 대전환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3번째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 주신 유재 선생님의 발제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었다. 특히 현재에 발을 디디지 못한 미래 학교, 교육 대전환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짚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신뢰와 관계가 무너지는 학교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로 들리는지도 현장의 모습을 통해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학교 공간에서 관계의 중요함과 더불어 관계는 공동체라는 인식 위에서 가능함을 일러 주었다.

오늘의 교육이 마주한 현실

“앞으로 10년 이내에 통일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 중학교 2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필자 혼자 손들었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 교사로서 당시 담임 선생님의 심정을 되짚어 보면, 통일 글짓기도 해야 하고, 그림 그리기도 해야 하는데 반장이라는 녀석이 통일이 안 될 것 같다고 손을 드니 담임 선생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 같다. 그러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산이 세 번이 바뀔 만큼의 시간이 흘렀지만 통일은커녕 아들이 군대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다. 앞으로 10년 안에도 여전히 통일은 안 될 것 같다.

우리 교육을 볼 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필자에게 중학교 추억이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교육의 향후 10년에 대한 기대 또한 통일만큼이나 기대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니 AI 디지털 대전환이니 그런 말을 더하지 않아도 교육이 대전환을 요구받는 시대임을 알고 있다. 또한 미래 학교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고 합의된 가치 위에 미래 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같이 만들어가야 함에도 틀림이 없다. 그러나 내일의 교육을 이야기하기에는 오늘의 교육이 너무나 우리 삶을 지치게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 교육과 미래의 학교 이야기를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시대적 위기 앞에 교육난제를 풀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교육이 자녀를 낳고 양육할 방해 요소가 되고 있으니 말이다. 11) 언론이 앞다투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곤 한다.

또한 학령인구 급감은 지금껏 미뤄둔 교육 난제에 더해 새로운 문제까지 풀어낼 것을 요구한다. 가령 망국의 문제인 대학입시와 대학 서열화 문제는 교육계의 오랜 숙제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의 시대에서는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대학의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까지 생겨 버렸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문제와 더불어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문제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언론 보도¹²⁾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2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이는 전체 학생의 2%에 해당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1.1%로 줄었던 수치가 1.5%, 1.9%, 2% 등으로 최근 꾸준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의 숫자도 계속 늘고 있다.¹³⁾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7천 626명이 중도퇴직을 했고 이는 12.6%가 급증한 수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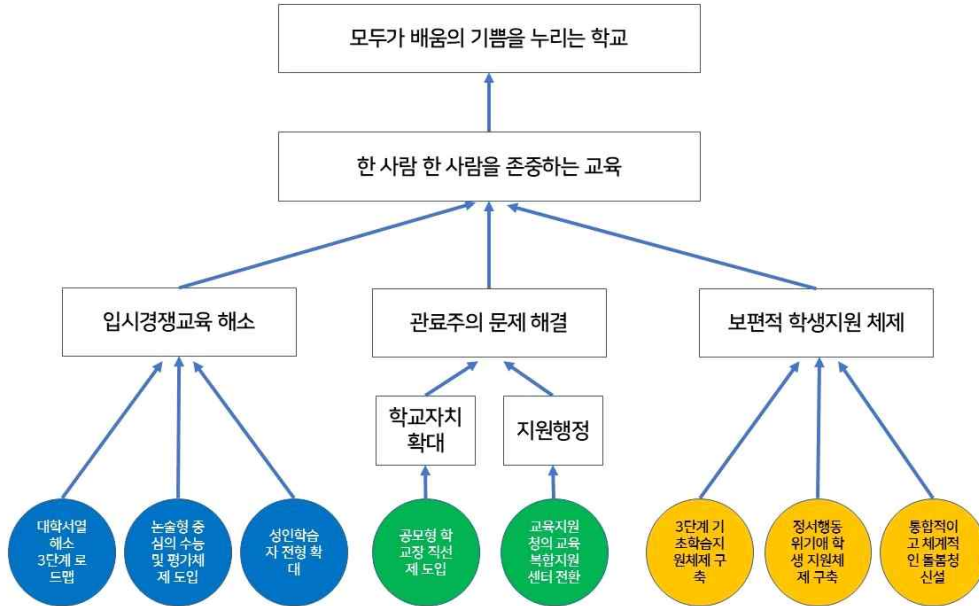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 사회가 미뤄두었던 교육난제들을 풀어야 할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감 시한까지 임박한 형국이다. 과연 우리 교육계는 마감 시한을 넘기지 않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까? 오랜 숙제도 못 풀고, 새롭게 부여된 숙제도 풀고 있지 못하는 게 오늘의 교육이 직면한 현실이 아닌가 싶다. 교육 대전환을 해야 할 시기에 전환의 방향도 읽고, 전환의 힘도 없는 것이 현재의 위기이다. 실은 이 위기를 풀어야 할 공식적인 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이다. 그러나 지난 2차 토론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숙제를 풀기는커녕 숙제가 되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11) KBS뉴스(2024.1.26.), 저출산위 “저출산 극복하려면 지나친 교육 경쟁 우선 해결해야”

12) 연합뉴스(2024.7.22.), 지난해 고교생 2만 5천 명 학교 그만둬… 5년 새 최고치

13) 연합뉴스(2024.9.30.), ‘학교 떠나는 교사들’ 작년 중도퇴직 7천 626명…13% 급증

맞이하고 싶은 미래,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2022 대선 공약을 제안하며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했던 교육개혁의 청사진이다.¹⁴⁾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가 우리 교육이 이르러야 할 도착지라면 적어도 3개의 핵심 과제를 풀어내야만 하는데 그것은 입시 경쟁교육 해소, 관료주의 문제 해결, 보편적 학생 지원 체제 구축 등이다. 3가지 핵심 과제에 따라 8개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도식으로 담을 수 없었던, 그러나 청사진의 이면에서 관통하는 두 가지 변화의 축이 있다. 하나는 공동체로서의 학교상이고, 둘째는 전문성 높은 교사의 양성과 배치라는 점이다. 우선 미래 학교의 모습이 현재의 학교 모습에서 분절될 수는 없다. 결국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서 미래 학교의 모습도 그려지는 것이다. 지금 여기의 문제를 풀지 않고 내일 거기의 문제를 풀 수 없다.

1) 공동체로서의 학교, 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

이를 위해 우선 공동체로서의 학교가 다시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가 교육공동체로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라. 가령,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교육의 여지가 있을까?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는 관련 학생을 교육하는 것보다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두 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작은 갈등도 촘촘한 학교폭력 처리 프로세

14) 월간 좋은교사 2021년 9월호, 특집 좋은교사운동이 제안하는 교육 개혁의 청사진

스를 따라야 한다. 사안 처리 중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각종 민원과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육적 해결을 운운하면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 학교폭력은 줄었는가? 학교는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되었는가?

학교폭력 이슈뿐 아니라 분리지도 학생, 정서행동 위기학생, 느린 학습자 문제, 대학 입시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는 공동체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대전환과 미래 교육 담론을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은 학교는 교육 기관이고, 공동체로 작동해야 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은 신뢰의 산물이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학교가 신뢰를 잃었을 때 공동체로서, 교육 기관으로서 작동할 수 없다. 신뢰가 없을 때 만들어내는 공문들의 수를 보라. 신뢰에 기반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나 그 애씀이 없다면 학교는 신뢰를 증명해 내기 위한 수많은 공문 더미들과 촘촘함 법률 해석의 그물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2) 미래 교육의 역량은 신뢰로운 공동체 안에서

교육 기관으로서 학교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소위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다양한 역량들이 실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협력적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역량, 신뢰와 존중의 관계 형성, 갈등 조정 등. 미래 교육에서 중요하다 말하는 역량들 중에 학생 혼자 책상 앞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삶의 역량들은 공동체를 통해 배우는 것이고, 안전하고 신뢰로운 공동체 안에서 배움은 더 풍성히 일어나는 법이다. 대전환이 된 미래교육은 배움의 공동체로서 작동하는 학교가 세워질 때 가능하다.

3) 대화와 공론의 장으로서의 학교

학교가 교육 기관으로서, 배움의 공동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 교육당국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대화와 공론의 장으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교육 3주체의 대화가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열릴 필요가 있다. 상대의 고통과 좌절된 욕구를 직시하고 약속된 규범 안에서 대화를 이어갈 때 학교(교육)를 공동체로 만들어갈 공동의 기반이 세워질 수 있다. 공동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날 선 공격적 언어들만 난무한다. 미래 교육으로 가기 위한 현재의 교육고통에 대해 교육주체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충분한 대화와 상호 이해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가기 위한

동력이 될 것이다.

교육 난제에 대한 숙의의 장 또한 필요하다. 교육계에는 논쟁만 무성하고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교육이 출생률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시대에 난제 해결 없이 미래 교육이 저절로 올 리 없다. 이 중차대한 교육 대전환의 시기에 지난 2년 동안 국가교육위원회가 보여준 사회적 합의 과정은 참 부끄러울 따름이다. 토론회 몇 번 하고 지방을 방문에 간담회를 개최하면 그것으로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 치는 것은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국 절차적 정당성만(실은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지만) 확보하는 시늉을 하고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교육정책 추진이 될 수는 없다. 사회적 합의의 과정에 이른다는 것은 오랜 시간 숙의를 한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 의견이 다른 당사자들이 충분히 학습과 토론을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숙의의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정책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숙의 과정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과 운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견고한 양당 체제, 승자독식과 각자도생의 사회문화 속에서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한 숙의적 대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영역에서부터라도 사회적 숙의의 과정을 학습시키고 그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 교육이 풀어야 할 숙제들에 대해 숙의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4) 전문교사 양성과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의 학교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에 있어 중요한 점은 교사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고 변화의 주체라는 점이다. 1차 토론회에서 확인하였듯이 학령인구가 준다는 명분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교사 수부터 감축해 가는 것은 교사를 변화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대표적인 정부의 인식의 표현이다. 교사를 변화의 대상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인식한다면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위기 앞에 교육당국은 어떻게 하면 보다 전문성 높은 교사들을 양성하고 배치할 것인가를 골몰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해 학급별 학생 수는 준다고 말하지만 지도해야 할 학생들의 문제는 심각해지기만 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의 도전적인 행동 문제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는 증가하지만 이 학생들을 지도할 전담교사는 현행 법률상 업무 담당자로 지칭될 뿐이다. 지난 10월 인천 특수교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교사들의 업무 경감은 이뤄지

지 않고 오히려 엄벌식으로 일관하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으로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여지는 점점 줄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는 전면 시행되지만 다교과를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부담은 해결되지 못했다.

교사의 지도 영역은 보다 세분화, 전문화가 되었지만 그에 합당한 교사 양성과 배치, 교원 연수 과정은 늘 제자리이고 이러한 부정교합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학교 공동체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의 공동체로서의 작동과 문제 해결력이다. 학생 수 준다고 교사 수를 줄이기보다 학교에 특정 분야에 전문성 있는 교사를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 학교 내 다양한 영역에 전문성 높은 교사들이 있고, 이들을 통한 통합적 지도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학교는 직면하는 다양한 학생 지도 문제에 대한 해결력을 확보한 전문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우리 교육은 향후 10년 내에 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럴 것 같다고 손을 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사로서, 교직원으로서 속한 한 사람으로서 책임임을 안다. 그럼에도 손을 들기에 주저함이 드는 것은 10년은커녕 당장 내년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새로운 길을 몰라서가 아니고 새로운 길로 들어설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각한다. 저 먼 미래의 길을 찾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찾은 길에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용기는 여럿이 있을 때 더해진 법. 5개 교직원단체와 국회가 함께하는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우리 교육을 미래 교육으로 나설 용기를 추동해 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

